

집값부터 소비까지 양극화 갈수록 심화

광주 아파트 가격차 4.7배
백화점 고가 명품 '볼티'
구직급여 신청자도 급증

광주·전남지역에서 소득 분배 악화로 부자와 서민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집값 양극화=광주 주택시장은 '초(超) 양극화'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지난 2004년 입주를 시작한 남구 봉선동 '포스코더샵' 전용 59㎡는 지난 9월에는 3억9500만원(4층), 4억2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지난달에 4억 8400만원(24층)까지 뛰었다.

2년 전 입주한 봉선동 '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의 매매가격은 지난 5월 6억 8500만원(5층)에 거래된 전용 84㎡가 7월 7억5800만원(5층)까지 뛰더니 9월에는 8억3800만원(14층)까지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입주한 북구 각화동 각화골드클래스 전용 84㎡는 지난 8월 3억 2400만원(7층), 9월 3억1600만(2층)~3억3500만원(22층)에 거래됐다.

지어진 지 1년 된 북구지역 아파트는 3.3㎡당 1200만원 수준인데도, 남구지역의 지어진 지 2년 된 아파트는 3.3㎡당 3200만원을 뛰어넘었고, 14년이나 된 아파트도 3.3㎡당 매매가격이 2600만원이 넘는 '초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 통계는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지난달 광주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7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4월(3.7) 이후 가장 높았다. 주택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 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이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 분배 정책을 점검하고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경제계에서 나온다.

고주택과 저주택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의미다. 1분위 저가 아파트와 5분위 고가아파트 격차가 3.7배(2013년)에서 4.7배로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달 광주지역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7만원으로 전월(1억2만원) 대비 5만원 올랐지만 5분위 고가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7351만원으로 전월(4억 5674만원)보다 1676만원이 올랐다.

◇소비 양극화=극심한 소비 양극화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전 디지털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은 1350만원짜리 삼성전자 QLED 75인치 TV를 선택 구입했다. LG전자 매장은 월 평균 3대 가량 920만원짜리 65인치 OLED TV가 팔려나간다. 신세계백화점 2층 명품매장 발렌시아가의 경우 입점 첫 날 매출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조적으로 호남지방통계청의 '일자리지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힘든 서민들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통계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구직급여 신청자는 지난해(1분기 7963명)에 견줘 올 1분기(9132명)에 14.7%가 늘어났고 전남도 12.7%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고용 사정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이 쪼그라드는 삶을 살면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근로소득(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사업소득(자영업자를 통한 소득)은 21.0% 급감했다.

이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 분배 정책을 점검하고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경제계에서 나온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협조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내일 마지막 협상 ... 대한민국이 주목

문재인 정부 새 일자리 모델
여야정 상설협의체 지원 약속
광주시, 2~3개 민감사안 조율

정계, 경제계, 노동계 등의 시선이 8일 광주시와 현대차의 마지막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의 첫 적용이면서 동시에 경제계, 노동계의 기준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광주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도부를 면담하지 못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켜야 하는 광주시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고 밝혔다.

당장청은 물론 야당까지 전폭적 지원의사를 밝힌 사업은 지금까지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그만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의미다.

시는 기존 초임 평균 연봉 3500만원에 공동복지 프로그램은 물론 중견기업 고용장

려금까지 포함시켜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 법인 및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더 늘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부시장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의 34세 미만 노동자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인력이 대부분 해당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초임 연봉은 4000만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초임 연봉 수준에 민감한 지역노동계를 달래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대차와 지역노동계가 아직 합의에 망설이고 있는 2~3가지 사안을 7일 투자유치지원단 회의, 8일 현대차 최종 협상 안에 모두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시장은 "이번주내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섭 광주시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경제의 미래"라며 성공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노동계에 간절히 호소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만약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6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아 현대차 노조 지도부와 면담하기로 한 지역시민단체 대표 18명은 현대차 노조 지도부의 거부로 만나지 못했다. 대신 이들 시민단체 대표는 현대차 노조에 광주의 열악한 경제 여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담은 협조 호소문을 현대차 공장 정문에서 발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말로만 상생

광주시와 전남도가 빗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혁신도시 시즌 2' 준비 작업도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낸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남도는 광주시와 최종 협의 없이 '2023년 이후에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사·도·상생을 통해 16개 공공기관을 나주로 이전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혁신도시에서 지

난 4년간 지방세가 쌓이자 이 돈의 사용 문제를 놓고 사·도가 불행사나운 '지역 다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6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는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최종 협의 없이 전남도가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은 "양 사·도지사 합의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애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추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갈등
추가 공공기관 이전 준비 흔들

현재 전남도는 빗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2023년 이후에 기금을 모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며, 광주시는 애초 약속에 따라 그 이전에 공동기금을 모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06년 사·도는 나주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기관 등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모아 쓰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4년간 나주시세와 전남도세를 합쳐 2925억원(이전 공공기관 포함 혁신도시 전체)의 지방세가 쌓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남도는 537억원(이전 공공기관 납부액)에 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8월 이우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참석해 민선 7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여는 등 사·도가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크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납부된 지방세는 537억원이며 빗가람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비용으로 1576억원이 투입돼 당장은 공동발전기금 출연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광주시와 12차례 조례 관련 실무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Shinsung Motors Safety First Campaign 신성자동차 고객 감사 안전 캠페인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신성자동차만의 안전 이벤트!
신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아주세요!

신성자동차 세이프티 1st 캠페인

- 일시 : 2018.10.15~2018.11.30
- 대상 :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전 지점

안전 주요 항목
무상 점검

엔진오일
업그레이드

Collection
Event

세이프티
서비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